

## 1. 그간의 정책성과



## 2. 복지정책의 여건 변화

### 2-1. 양극화 속의 한국

#### □ 고령화 v.s 저출산

-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: 8.7(2004) → 14.4%(2019)
- 농촌은 2000년 이미 초고령 사회(65세 이상 노인인구 14.7%) 진입
- 100년후면 1,7백만명으로 인구감소: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(1.19)
- 합계출산율: OECD평균 1.6, 일본 1.32, 미국 2.01

#### □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확대

- 영세 자영업의 과잉공급: 취업자 2천2백만명 중 1/3이 자영업자
- 독일(11.1%), 영국(11.1%), 일본(16.35), 미국(7.2%)의 2~5배
-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확대
-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5~9인 기업 임금: 58%(00) → 51%(03)

## 2. 복지정책의 여건 변화

### 2-1. 양극화 속의 한국

- 국부의 상류층 집중경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
  - Gini 계수: 0.283(97) → 0.319(01) → 0.306(03)
  - 5분위배율: 4.49(97) → 5.36(01) → 5.70(04.1/4)
- 공과금 납부는 물론 최소한의 생활영위조차 어려운 계층 확대
  - '04.8월 건강보험료 체납은 170만 세대(전년동기 12% 증가)
  - 2년이상 국민연금 장기체납자(98만명)
  - '04.6월 전기료 연체가구 82만가구(전년동기 17% 증가)
-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: 고용시장 패러독스
  - Good Job 축소(구직난) ↔ Bad Job 확대(구인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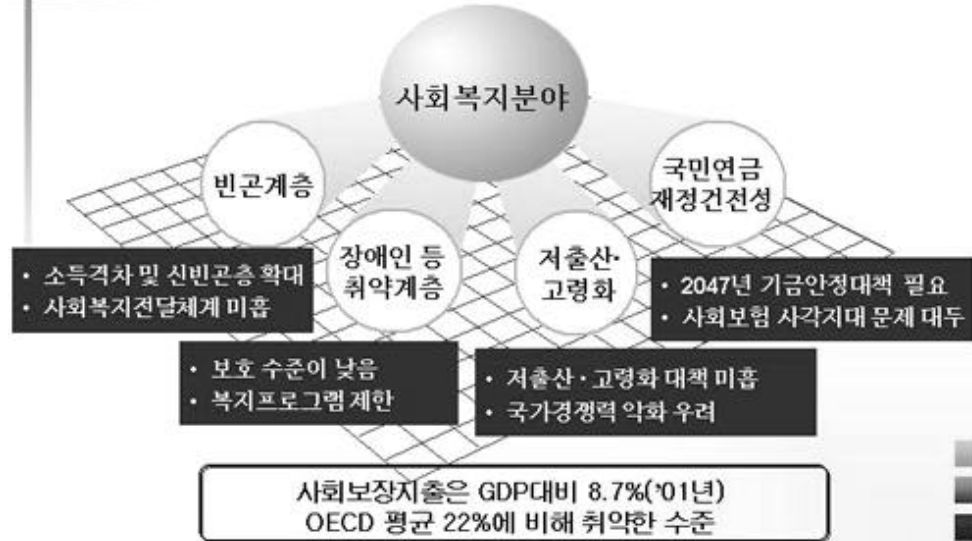
## 2. 복지정책의 여건 변화

### 2-2. 복지 사각지대

- 인구의 4.8%는 비수급 빈곤층(재산, 부양가족 사유 탈락)

소득	잠재적 빈곤층	
최저생계비의 120%	전 인구의 약 4.2%	
최저생계비	기초생활보장 수급자	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
	전인구의 약 3.2%	전인구의 약 4.8%
	재산	

### 3.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제



#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# 4.1. 기본방향

- 기존 사회보장제도 개혁 및 제도간 연계 강화
  - 제도간 연계 강화 :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
    - ※ 노후 소득보장 : 국민연금(1차) → 기초수급(2차) → 경로연금(3차)
  - 국민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
  -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(all or nothing) → 차상위계층 부문급여 확대
  - 공공의료 강화 대책('05-'09년까지 4조원 투입계획)
-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
  -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(Work-fare)
  -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등 고령화 대책
    - ※ 고령화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3%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전망
  - 국민연금 전략적 자산운용 : 서민 생계안정 + 경제활성화 동시 겨냥

### 3.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제



#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# 4.2.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및 일을 통한 빈곤탈출

-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
  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: 1촌의 직계혈족,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('05.7월 시행)
  - 근로빈곤층에 대한 의료·교육·주거지원 확충
    - 차상위 의료급여를 '05년 초등생 이하 빈곤아동에 확대(173천명)
    - '07년까지 전체 교학생 20%까지 학비지원 확대, 임대주택 공급확대
  - 적극적인 빈곤층 보호를 위해 "선보호 후처리" 추진
-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
  - 근로소득보전세제(EITC) 도입 검토
  -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연계('08년까지 5만개)
  - 자산형성지원사업(IDA) : 창업, 교육 목적 개인저축에 매칭펀드 조성
  - 무보증 소액창업대출(Micro-credit) 등 저소득층 창업지원 혁신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.2.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및 일을 통한 빈곤탈출

#### □ 복지전달체계 개선

#####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

##### 사회복지사무소 설치

- 시·군·구청 소속 복지전담기구
- 복지업무의 효율화·전문화
- 공공부조·복지서비스의 내실화
-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(06)

##### 공공·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성

#####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

- 시군구 내 공공·민간복지 협력기구
- 지역 복지자원 및 서비스의 연계
- 지역복지에 민간참여 기반 마련
- 시범지역부터 구성, 전국 확대(05.8)

정부-지방-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지원체계 구축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.3. 저출산·고령화 대책 추진

#### □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 제정 추진

- 국회 제출 (2004.11.8)
-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고령사회위원회(위원 25인 이내) 설치

#### □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

-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증가 : '04년 62만명
- 노인의료비(건강보험 급여비)
  - '95 : 7,281억원 → '03 : 4조3,723억원
- 금년도중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입법 추진
  - 급여체계, 요양 대상자 등급구분 등 기술적 사항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.3. 저출산·고령화 대책 추진

#### □ 출산 안정화 및 인구자질 향상

- 혼인, 가족 가치관 재정립
-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및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확대
-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
  - 산전후 휴가확대, 육아휴직 급여,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
-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출생성비 균형화

#### □ 노후소득 보장

-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: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
- 공적연금간 연계체계 구축 추진
- 경로연금제도 개선 : 지급 수준 및 대상확대 추진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.4. 장애인 복지증진

#### 장애수당 확대 및 일자리 창출

-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전체 기초수급 장애인 27만명(04년 14만명)으로 확대
-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

#### 장애인 권리증진

- 장애인계 요구 및 외국 입법례 고려,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
- 장애인 LPG 사용 합리적 제한
- 전문체육업무를 문화관광부에 이관 추진
-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충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-5. 건강보험의 내실화

-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 시행
  - '01년부터 건강보험의 누적적자를 '04년에 흑자 전환(약 700억원)
-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
  - 금년도중 1.5조원을 투입하여 MRI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
- 보험급여체계 및 수가지불제도의 개선
  - 장기요양수가 개발 등 노인의료비 대책 강구
  - 공단-의료계간 요양급여비용(수가) 계약의 원만한 합의
  - 중장기적으로 비용효과적 지불제도 개선 검토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-7. 보건의료체계의 합리화

-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
  -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
  - 지역암센터(9개소) 설립, 지방공사의료원(34개소) 현대화
  - 보건소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밀착형 공공보건의료기반 강화
-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
  - 전문병원제 도입, 개방병원 활성화, 시설 및 인력기준 합리화
- 선진병원경영 환경 조성
  - 의료기관 회계기준, 의료기관 평가제도 시행
  - 의료광고 규제완화,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
- 보건자원의 효율적 활용
  - '07년까지 의대정원 10% 단계별 감축
  - 비인기과목에 대한 수가조정, 병원군별 총정원제 등 추진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-6. 국민연금 개혁 및 기금운용체계 혁신

- 국민연금의 장기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
  - 급여수준 : 현행 60% → 50%(2005~2007년 55%)
- 기금운용체계 개편
  -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
  -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
-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 수립
  -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최적자산배분안(공공목적·복지·주식투자 등)과 투자정책(의결권 행사 등) 제시
  -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BTL방식 투자 검토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-8. 보건산업의 육성

- 5대 보건산업 육성전략 수립
  - 의약품, 식품, 의료기기 등 5대 보건산업 규제 완화
- 보건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
  - 보건산업발전협의회(위원장 : 복지부 장관) 운영
  - BT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  - 보건의료기술 R&D 투자 강화
- 한의약을 미래산업으로 육성
  - 대구, 경북 지역에 한방산업단지 조성 추진
  - 한약재 등급화제도, 품질인증사업 실시
  - 한의약 육성·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-9. 식품 및 혈액 안전체계 구축

#### □ 식품안전체계 구축

- 소비자보호우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
- 소비자 감시 확대, 1399 전화, 인터넷신고 등 감시시스템 강화

#### □ 혈액안전체계 확립

- 혈액원 허가제 및 혈액제제 제조관리기준 등 정도관리 실시
- 혈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평가체계 마련
- 현장에서 헌혈자 정보조회로 안전한 혈액 선별
- 헌혈의 집 증설, 혈액수가 현실화 등 혈액수급 기반 구축

## 4. 복지정책 발전방향

### 4-10. 건강증진서비스의 확대

#### □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

- 작년에 이어 금년에 500원 인상
  - 담배가격 : 선진국의 20 ~ 30% 수준
- 인상분의 활용 : 금연사업, 암검진,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

#### □ 전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

- 전염병 진단 신기술 도입 등 예방관리 로드맵 강화
- 신고체계 강화, 방역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
- 동북아 전문가 협의체, WHO, CDC 등 국제협력체계 구축

#### □ 국가 질병관리체계 확립

- 암정복 10개년 계획 지속 추진
- 만성질환관리법 제정 추진을 통한 10대 만성질환 국가관리